



“항쟁정신으로 5월 말·7월 금속노조 총파업 조직하자”

75주년 4.3 민주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 “민중 위해 산 오른 투쟁정신 살아있다”

“항쟁정신 살아있다,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산별노조연맹 대표자, 조합원 등 2천여 명이 75년 전 평등 세상을 열망한 제주 민중의 항쟁 정신을 기리고, 윤석열 정권과 자본에 맞선 5월 총궐기, 7월 총파업 투쟁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4월 2일 제주시청 앞에서 ‘75주년 4.3 민주항쟁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윤석열은 민주노총에 선전포고하고 탄압하고 있다”

라며 “탄압에 항쟁으로 맞선 제주 민중의 투쟁 정신을 이어받아 총파업을 조직하고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 이제 항쟁의 시간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투쟁사를 통해 “한라산을 근거지로 삼아 민중을 위해 물러섬 없이 싸운 제주 노동자의 결기 어린 각오가 윤



석열 정권과 자본주의 체제에 맞선 민주노총 투쟁 의지로 되살아나고 있다” 라면서 “75년 전 민중의 몸은 죽었으나 항쟁 정신은 살아있다” 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4.3항쟁 정신 계승 평등사회 건설하자”, “항쟁정신 살아있다, 노동개악 투쟁으로 저지하자”, “노동탄압 노동개악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라며 제주시내 행진

에 나섰다.

금속노조는 ‘자주 평화 순례단’ 이라는 이름으로 4월 1일 4.3 평화공원과 관음사, 북촌초등학교 등 항쟁지와 학살 터를 찾아 75년 전 제주 4.3 민주항쟁 정신을 되새기는 평화기행을 진행했다.

이번 금속노조 평화기행에서 해설사를 자청한 조합원들이 교육을 받고 해설사가 돼 역사 현장에서 동지 조합원들과 함께 호흡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평화기행에서

“2023년 정세와 75년 전 정세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기행을 다니면서 올해 어떻게 투쟁해야 하는지 느꼈을 듯하다” 라며 “금속노조가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오늘 역사 현장에서 항쟁정신을 깊이 새긴 동지들이 5월 말 총파업, 7월 민주노총 총파업을 힘차게 조직해달라” 라고 당부했다.

한국타이어 화재 참사 완전 정상화 촉구

노조, 대전공장 화재 관련 요구 발표 ... 배치전환·휴업 노조 협의, 참사 악용 부당노동행위 중단 등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노동자들이 지난 3월 12일 화재 참사에 대해 “예견된 재난으로 조현범 회장 리스크와 무책임 경영 구조가 원인이다”라며, 사측에 완전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는 3월 30일 오전 대전공장 앞에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참사에 대한 금속노조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타이어지회는 “매년 소방 점검 결과 불량률이 다수 드러나는 등 대전공장의 화재는 예견할 수 있었다”라며 “삼성증권은 대전공장 화재 참사 보고서를 통해서 ▲대전공장 세 번째 화재 ▲반복 화재, 설비 노후화 의미 ▲생산 재개 위한 보수 투자 필요를 강조했다”라고 설명했다.

지회는 “증권가 사설 정보지에 ‘회사가 재고를 털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 목시로 화재를 방조하고 예방하지 않았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라면서 “화재 참사 책임은 명백히 회사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지회는 “직접 원인 규명이 중요하지만, 설비 노후화 시설투자 전무, 생산 중심 경영, 사고 예방·대책 취약, 경영진 도덕 해이, 불법경영 등이 사고를 막지 못한 근본 원인이다”라며 “화재 참사 구조적 원인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회는 “사측은 화재 참사 이후 너무나 편안하고 한가하게 수습하고 있다”라면서 “대전 시민의 불안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고, 대전공장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공포를 증폭하고 있다”라고 분노했다.

지회는 “인사 관련 현장관리자들이 화재 복구 상황을 악용해 금속노조 탈퇴 종용, 선별복귀 통한 노동조합 간 차별을 저질러 현장은 아비규환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지회는 “한국타이어는 화재 참사의 피해를 노동자와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면 안 된다”라며 ▲공장 정상화·고용보장·피해지원 노사협의체 가동 ▲배치전환·휴업 시 노동조합 협의 ▲회사·대전시 정규직·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대전 시민 피해지원 ▲고용불안·위기 악용 노조 간 차별·금속노조 탈퇴 종용 등 부당노동행위 중단 ▲재난 재발 방지 노사공동 안전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